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정례조회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통합돌봄, 박수받을 정책”

정례조회서 ‘돌봄 가치’ 공유
오늘 성공추진 13개단체 협약

광주시 공직자들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가치를 공유했다.
광주시는 7일 대회의실에서 3월 정례회의를 열고 ‘돌봄(복과 함께 찾아오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담당 주무관은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의 가치와 비전을 발표했다.
김경명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시민 모두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한 도움이 손길

을 드리는 것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국회의원 시절 기초노령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일화 등을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고령화·저출생 시대에 틈새를 메워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 당시 전 국민 고용보험, 치매국가책임제 등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옳다고 믿기에 사회

안전망 강화에 노력했다”며 “전국첫 사례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앞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이미 성공하고 박수받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8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3개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인구위기 극복, 영향평가 도입”

정책회의서 인구변화 분석 주문
산불예방 행정력 총동원 지시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역대 최저 출산율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에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인구 정책은 해당 부서뿐 아니라 모든 실국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고, 전남지역도 0.97명

으로 1명대가 무너졌다”며 “도청 모든 업무에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선 유통단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우 유통단계를 줄이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비싸지 않게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남도장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와 직거래장터 개설로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도청 내부 평가와 분석,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

체, 도민 등 외부에서 잘 하는 일에 대해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며 “가령 최근 신안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 조성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도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산불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 애초 및 계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전국 첫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지원

월 100만원 한도 최고 500만원
10억 긴급투입...730여곳 혜택

전남도는 7일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2023년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달러 당 월

100만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연 수출액 1,000만달러 이하 전남지역 중소기업 730여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국제협력과실(061-286-2451)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속되는 국제적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교육대 8대 허승준 총장 임명

“지속가능한 종합대 실현”

광주교육대학교는 제8대 총장으로 특수통합교육과 허승준 교수(사진)가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허 총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7년 3월 5일까지이다.
허 총장은 1992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철학박사(특수교육)학위를 받았다.
2002년 광주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로 임용돼,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통합교육지원센터장, 영유아교육지원센터장,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상담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국정 자



문단 자문위원, 광주시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 전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 운영위원 등 각종 자문 및 운영위원을 도맡아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해 왔다.
허 총장은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종합대학교 실현에 내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의 취임식은 오는 30일 광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 최대 현안·미래먹거리

▶1면에서 계속

3년이면 가능한 다른 나라와 달리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주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지난 2021년 5월 발의됐지만, 수협, 어민, 해수부 등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어민 수용성 제고와 해수부 역할 강화를 골자로 산업부 등 정부 부처 합의안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해 기대감을 키웠다. 한무경 의원의 법안은 전남도도 동의한 안이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가 각각 발의했다는 점에서 고무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지난달 20일 김원이 의원 법안 등 3개 법안

이 함께 논의된 상임위 심사에서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들은 환경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미흡 등 관계부처와 권한을 조율했는지 등을 지적했고, 기존 사업자 권한 매수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 사업자들도 예비지구 내에 계속기를 매도한 사업자에게 입찰시 우선권을 주는 조항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원이 의원의 특별법은 육·해상 풍력을 아우르는 탓에 어민들이나 해수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상임위 논의는 상징적인 법률안에 대한 스터디 개념이었으며, 입지 정보망 구축 등 해수부의 역할을 강조한 법안 등이 발의된 만큼 3월 중 세 개 안이 병합심사 돼 늦어도 상반기 중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 공고 제2023-489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외초리·에내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8.

고 흥 군 수

1. 제한지역
가. 위 치 :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외초리·에내리 일원
나. 면 적 : 1,729,176㎡

2. 제한사유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부분별한 개발 행위와 난개발을 물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및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지면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위 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

5. 제한 제외대상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 다른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등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 공사를 임시기설건축물의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6.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 3. 8. ~ 2023. 3. 22. (14일간)
○ 장 소 : 고흥군청 우주항공추진단

7.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개제 생략)

8.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9. 본 공람(29)은 최종 열람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추진단 우주산업팀 ☎061-830-5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판매

드림 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